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7월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지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제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점 5.1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년간 누산 별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주요 원재료 가격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협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수급 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신용호	(044-200-4947)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 대협협상 요건 완화 [안 제9조의2]

□ 개정 하도급법(제16조의2)은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해온 수급사업자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정 대협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 (개정전)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 (개정후) 공급원가가 (삭제) 변동된 경우

○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 대신 조정협상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협협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정 대협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협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협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3조제1항제7호]

□ 개정 하도급법(제3조제2항)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 개정 하도급법(제3조제4항)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90일 /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라.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방법 [안 제6조의6]

- ☐ 개정 하도급법(제3조의6)은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 및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연동우수기업등의 선정 권한, 선정방법·절차, 지원시책에 관해 규정하였다.
 - 공정위가 매년 미리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구체화 [안 제6조의7]

- ☐ 개정 하도급법(제3조의7제2항)은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다.
 - 개정법은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동지원본부가 연동제 홍보, 우수사례 발굴, 통계 작성·관리, 연동제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 연동지원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안 제6조의8 및 별표6]

- ☐ 개정 하도급법(제3조의7제5항)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방식, 지정 요건, 신청서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해 규정하였다.
 - 공정위가 관련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 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 조직·인력, 사무공간을 갖추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하고, 연동지원본부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연동지원본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상(제3조의7제4항)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사.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3]

- ☐ 개정 하도급법(제26조제2항)은 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범위만행위에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제3조제2항), 성실 협의의무 위반(제3조제3항), 서면 기재사항 예외 관련 위반(제3조제4항), 탈법행위(제3조제5항)를 포함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별점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별점 3.1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였다.
- 그 외 범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에 대해서는 현행 별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였다.

아.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5]

- 개정 하도급법(제30조의2제4항 및 제5항)은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동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원재료 가격 등이 변동할 경우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977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생략)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현행 제6조의 부분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설>	7.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신설>	②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③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제3조제8항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제3조제8항 - 제9항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 3. (생략)	-----
② ~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 심사) ① -----
② (생략)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6조의3(자문위원) ① -----제3조의2제7항-----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 발굴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

<신설>

분석 및 만족도 조사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7.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의8(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p>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생략)</p> <p>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p> <p>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p> <p>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p>	<p>야 한다.</p> <p>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p> <p>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p> <p>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p> <p>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p> <p>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p> <p>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p> <p>③ ~ ⑤ (생략)</p> <p>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p> <p>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 4. (생략)</p> <p>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p>
--	--	--	---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 6. (생 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별표 3]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생 략)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
우

2) ~ 5) (생 략)

다. (생 략)

<신 설>

[별표 5]

1. 일반기준

가.~나. (생 략)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삭 제>

3. 조합원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수급사업자 목록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항-----

1. (현행과 같음)

2. -----

-----제7항-----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 -----
-----,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2) ~ 5)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
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
하여 법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 : 5.1점

2) 그 밖에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
는 경우 : 3.1점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예
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4) (생 략)

<신 설>

5)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 설>				
<신 설>				
가. (생 략)	법 제 30 조 의2제 4항	100	200	300
나. (생 략)	법 제 30 조 의2제 5항	100	250	500
다.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
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법 제3
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
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6) (현행 5)와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서면 에 하도급 대금 연동 에 관한 사 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 30조 의2제 5항제 1호	1,000		
나. 법 제3조제 5항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30조 의2제 4항	3,000	4,000	5,000
다. (현행 가. 와 같음)	법 제 30 조 의2제 5항제 2호	--	--	--
라. (현행 나. 와 같음)	법 제 30 조 의2제 6항	--	--	--
마. (현행 다.와 같음)				
바. (현행 라.법 제		--	--	--

라. (생략)	법 제 30조의2제6항	50	75	100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신 설>

와 같음)	30조의2제7항			
사. (현행 마.와 같음)				
아. (현행 바.와 같음)				
자. (현행 사.와 같음)				

[별표 6]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8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령을 받은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7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